

# 빌라·오피스텔 ‘층간소음 피해보상’ 사각지대

### 광주 최근 3년간 평균 800여건 이상 신고...다툼 번진 사례도 한국환경공단 ‘구조상아파트보다 취약...정부차원 대안 필요’

#최근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오피스텔로 이사한 A씨는 극심한 층간소음에 매일같이 윗집과 얼굴을 붉히고 있다. 쿵쿵거리며 걷는 발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 등의 소음을 처음 들었을 당시 ‘조용히 좀 해달라’는 쪽지까지 붙여줬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다. 참다 못해 윗집과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에 신고까지 해 봤으나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층간소음’ 피해 신고가 연평균 8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국 단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대책 수립에 나섰다. 기존 아파트와 빌라·오피스텔 등은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이웃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9

15건 ▲2022년 917건 ▲2023년 871건이다. 층간소음 신고 접수장소를 공동주택(아파트)과 비공동주택(빌라·오피스텔 등)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비공동주택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는 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고 내용은 ▲뛰거나 걷는 소리 ▲공구 사용 중 나는 소리 ▲가구가 끌리거나 찍히면서 나는 소리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리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분석됐다. 문제는 윗집에서 내는 소리가 아랫집

에서는 소음으로 받아들여져 이웃 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 서부경찰서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 윗집에 갈을 들고 찾아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인터폰과 벽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협박)로 B(40대·여)씨를 체포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시공사에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소음 기준 충족 때까지 보완공공 의무화 ▲시공 중간 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기준

초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배상 책임 등을 부여하는 ‘층간소음 해소방안 및 예방안’을 발표했다. 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평균) 39dB, 최고소음도 57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각각 34dB·52dB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예방안이 율해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이웃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가 진다는 점에서 보다

꼼한 시공을 통한 층간소음 원천 차단이 물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와 비공동주택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기둥, 들보 등 골조를 날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된 벽식구조가 많아 위층과 아래층의 소음이 더 쉽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해가 갈수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은정기자

## ‘6·25때 총살’ 화순 민간인들 유족 손배소 승소

### 10명 386만-2천514만원 받게 돼...세 살때 본 아버지 죽음 일흔 넘어 보상

법원이 6·25 한국전쟁 당시 화순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21일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 화순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 등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으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마을 뒷산에서 빨래를 하고 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으나 재판에 사건 당시 3세였던 A씨의 아들(현재 77세)과 11·13세였던 이웃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 당시 목격할 상황을 진술하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희생 당사자 A씨 8천만 원, 부인 및 자녀들에게 각각 800만~4천만 원 등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판결 확정 시 유족 10명은 상속액에 따라 386만~2천514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안재영기자



무장애 실현 '장애공감' 캠페인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과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21일 대성초교 사거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공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주남구 제공>

### 민방위 훈련 빼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 집행유예

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수한 것처럼 꾸민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위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각각 3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집

C씨가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공문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A·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는 수혜를 입은 C씨가 A씨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구청은 A·B씨를 징계하려 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시효가 지나 하지 못했다. /안재영기자

### 살인죄로 수감 중 '허위 고소' 50대 추가 징역형

살인죄로 수감 중인 50대가 교도소에 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화 부장판사)

는 21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 자신에게서 1억4천만 원을 빌린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내용 모두 허위로 드러나,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재영기자

## 전남대 의대 교수들 '비대위 체제' 전환

### 사직서 제출·의료행위 축소 등 논의...전대·조대병원 병동 추가 통합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한 지 한달여가 된 가운데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 설문조사에는 전남대 의대교수와 전남대병원 임상교수 요원 등 18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장은 아

동을 추가 폐쇄 및 통폐합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비상진료 체계 운영으로 입원실기동률이 저조한 재활의학과 심뇌재활병동(6동 12층 10병상)을 폐쇄했다. 전남대병원원 앞서 비뇨기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3개 병동도 폐쇄해 운영 중단 병동은 4개로 늘었다. 조산대병원도 전남부터 성형외과·비뇨기과·순환기내과·류마티스내과·감내과 환자 입원병동인 52병동·53병동·52병동·72병동을 다른 병동과 통폐합했다. 화순전남대병원(분원)은 최근 중앙내과 병동 3곳 중 1곳을 줄여 통폐합했다. /기수희·김다미 기자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